

형사 소송법 개정을 위한 이인기 의원 주치 공청회

선진국형의 檢·警 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돼야

전국의 前·現職 警友 등 5천여명 참석해 意志 표명

최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한 나라당 이인기 의원 주치로 열린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용희 국회 행정위원장,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수 국회의원,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경우회원, 현직 경찰관 및 일반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수사권 조정을 열망해 온 경우회가 『국민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원한다. 대명천지에 상명하복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서명을 받는 가운데, 전국의 경우 약 2천여명이 상경하는 등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를 청산하고 선진국형의 檢·警 수사권 공유체제로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인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흐름』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 위 아래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와가는 상호보완 관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보다는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수사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용희 행정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검·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독점으로 인한 권력부패도 문제지만 경찰 또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 것이 옳지만 수사권은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직접 공청회를 주관해 보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며,

검사출신이지만 절대 어느 일방에 편종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재발표에 나선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성을 명시하고, 제 196조에서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해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되고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팀장은 『이제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혁의 한 주제인 검찰 이외에는 그 누구도 큰 이견이 없는 공지의 사실이며,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은 경·검간의 관계를 전근대적인 지휘관계에서 민주적인 통제관계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형소법 개정은 경찰이 실제로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단순한 문제이며,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함으로써 양 기관이 협조하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자유토론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정정원 전북 경우회장은 『한 검사에게 몇십건에서 백건 이상의 사건이 배당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과연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완수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당수 참석자들이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 하는 가운데, 지방에서 올라온 한 警友는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급 상향조정 필요

허준영 경찰청장, 직급차이 때문에 원활한 국제 교류협조에 차질



최근 허준영 경찰청장이 타국과 원활한 경찰업무 교류를 위해 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 9월 인터폴 총회 참석에 앞서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한 국특파원으로부터 치안총수의 직급을

높이는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고 『국가간 치안공조가 확대되면서 경찰간 접촉이 잦아지고 있으나 직급 차이로 원활한 교류와 협조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허 청장은 『검찰은 차관급 이상이 40명이고, 군은 중장 이상이 모두 차관급』이라고 밝힌 뒤 『경찰 조직은 직원 수가 9만 4천명으로 국가공무원 조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며 경찰청장 직급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의 이런 언급은 대부분 국가에서 치안책임자의 직위가 장관급이어서 동등한 카운터 파트로 만나 업무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과 경찰청장의 직급이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공무원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43.6% 경찰관, 검사의 수사지휘 도움 안돼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 수사경찰 500명 설문 조사

최근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수사경찰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장에 배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가 수사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43.6%의 경찰관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고, 나머지 37%는 보통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가운데 93.4%는 검찰로부터 현장감이 떨어지는 수사지휘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럼에도 검찰지휘에 이의 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응답이 68.1%였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14.5%, 무응답 17.4%였다.

한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 70.2%, 더 부당한 수사지휘나 상사 소환 등이 두려워서 26.3%였고, 검사를 존중하거나 지시가 옳다고 판단해서 2.6%에 그쳤다. 이 밖에 검찰로부터 욕설, 반말 등 모독을 받은 적 있다는 44.1%, 검찰의 퇴근 등으로 업무지연을 경험했다는 76.1%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태릉 국제 종합사격장에서 민·경 친선을 도모하고, 사격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체력증진 및 사격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제1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를 가졌다. 허준영 청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스쿨폴리스』제 전국 확대 시범 운영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약 3개월간 시범운영했던 스쿨폴리스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제도의 분석결과 학교폭력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기간이 짧아 효과검증에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 등에 따라 각 지방청 및 시도 교육청간 협조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의 스쿨폴리스 운영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뿐만아니라 교사까지도 대부분이 스쿨폴리스 제도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내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답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부모 80.3%, 학생 58.1%가 지속적인 실시

를 선호했고, 가장 우려가 되었던 교권침해 여부에 대해 교사 스스로도 47.2%가 교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답했으며, 20.2%만이 교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답해 교권침해 우려에 대한 일부 보완이 된다면 시행에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교사를 상대로 상담명예교사와 생활지도 기여도면에서도 긍정적 의견(44.2%)이 부정적 의견(34.4%)보다 높게 나타나 스쿨폴리스 제도가 상담교사보다도 생활지도에 더욱 효과적이란 것이 입증되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여론조사와 설문결과에 따라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전국

확대시행을 결정하고, 9월중 각 지방경찰청과 교육청간 협의하여, 지역별로 희망하는 1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10월중으로 警友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스쿨폴리스 지원자를 모집,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11월부터 확대시행하되 겨울 방학기간은 제외하는 한편 새학기 시작 전후 학교폭력서를 구성 및 유인차단을 위해 내년 3~4월에 중점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감독하에 학생생활지도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협의, 교통비 및 식비 등은 지원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우회는 이번 경찰청의 스쿨폴리스제도의 전국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각 시도 단위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모범경우회원을 추천하는 등 스쿨폴리스제에 경우회원의 적극 참여로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檢·警 수사권 分權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합시다

지난 5월 17일 제 29차 정기 총회시 檢·警 수사권 분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 취지문과 서명부를 전국 경우회에 보내 드린 바 있고 1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중앙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서명부에 서명 후 절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 취 선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2			
3			
4			
5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경찰 60년사』편찬을 위한 자료 모집

국립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찰 60년 역사』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지난날 선배님들께서 경찰에 투신하시어 쌓아온 업적과 공로를 바탕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사료, 문서나 사진, 메모록(업무노트), 임명·발령장, 유인물 기타 경찰간행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 등을 모집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역사편찬 사료로 활용한 후 돌려 드릴 것이며, 원하시면 금년 경찰의 날 개관 예정인 경찰박물관에 기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 음 -

● 한국경찰 60년의 기간 설정 :

- 1945. 10. 21~2005. 10. 20
- 2005. 10. 21 : 제 60주년 경찰의 날
- 2006. 10. 21 : 제 61주년 경찰의 날

● 기본 사양

- 권수 : 1질 5권(본문 3권, 자료집 2권) 기준 2,000질, CD 3,000세트

● 편찬기간 및 주요일정

- 소요기간 : 2005. 5.~2006. 10(1년 6개월)
- 1차 기초자료 수집 : 2005. 4월~6월

- 편찬완료 : 2006. 10월초

● 자료수집기간 : 2005년 12월 말까지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09번지 경찰청 지하1층 112호실(우편번호 120-704)
- 연락처 : 02-362-6089 한국경찰60년사 편찬팀장 이병무(010-6456-7123), 경감 장희동(018-420-5781), 경위 김성철

※ 사료를 제공해 주신 선배님들께는 발간이 완료되는대로 『한국경찰60년사』1질(5권내외)을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청 경찰 60년사 편찬팀